

2005. 11. 21(월)배포

문의 / 광대역통합망과 서석진 과장(750-1240)

박용민 사무관(750-1245) ympark@mic.go.kr

※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

정통·건교, 양 부처 공동으로 u-City 구축 추진

-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T/F 팀 구성 -

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, 거주민의 생활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,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과 주민 복지 증대, 신산업 창출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C 첨단도시인 u-City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.

지난 10월 28일(금)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통부와 건교부는 체계적인 u-City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으며,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양부처가 공동으로 T/F팀을 11.18일 구성하였다.

현재 국내에는 각 지자체별로 u-City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전략수립 단계로서,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명확한 이해가 없어 도시간 서비스 연계·통합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고, 실제 이를 도시공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접목 및 법·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.

T/F팀은 양부처 국장급의 협의체로 구성하며 지자체·유관기관·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전담반을 두어 u-City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, '06년에 「u-city 건설지원법(가칭)」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.

이를 위해, 지자체, 유관기관,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.

이번 양 부처의 공동추진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u-City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, 그간 개별 지자체 또는 사업자 차원에서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u-City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
또한,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u-City 구축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술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, 성공 모델에 대한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하여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붙임 : u-City 개요 1부. 끝.

【붙임】

u-City 개요

- u-City는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킴으로써
 - 주민의 편의·복지·안전도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신산업 창출 등이 가능한 21C 미래형 도시
 - ※ 도시민이 원하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서비스를 도시 구현 초기부터 구축함으로써 소요 시간 단축 및 투자비 절감을 통해 경제성 확보
- 정부/지자체는 u-City 구축을 통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,
 - 해당 주민에게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며,
 - 또한,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,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 도입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 가능

< U-City 개념도 >

